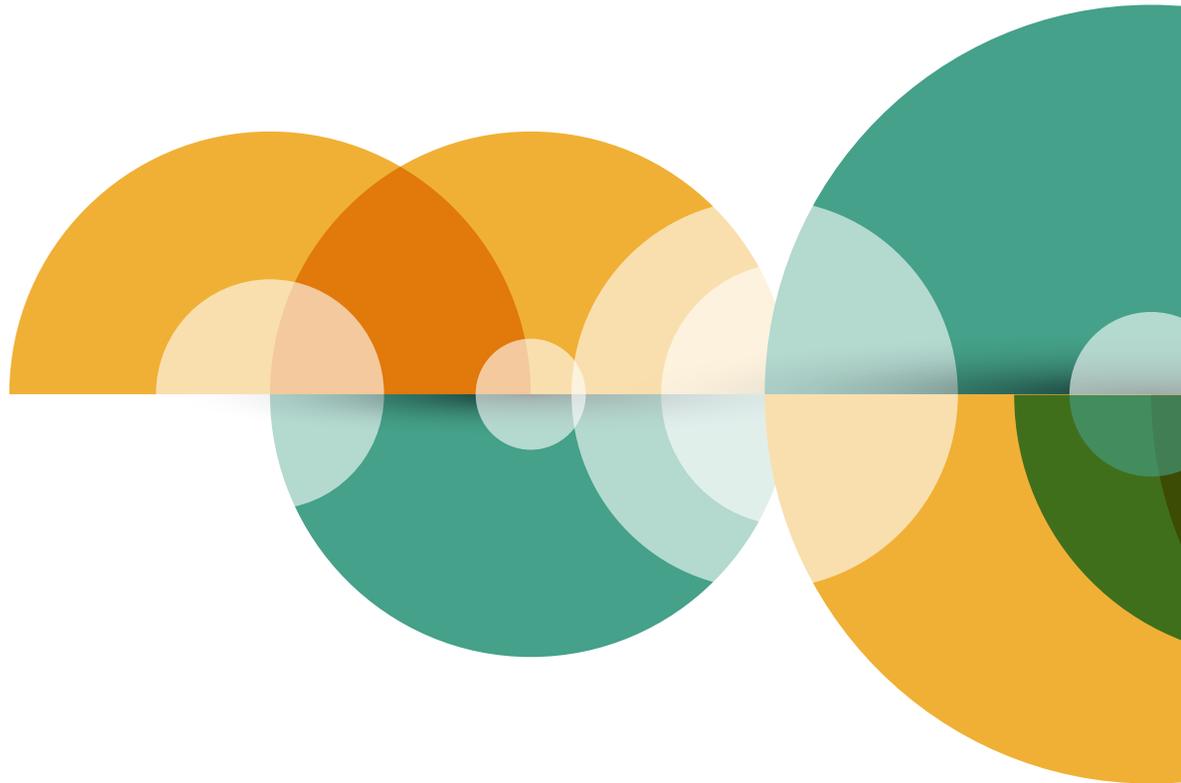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책임작성 | 정은애 연구위원(02-707-8272, eajung@kosi.re.kr)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1. 서론
2.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
3.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점
4.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 | 요약

-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국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저소득자·비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세 업종 및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
    - 자영업자 대출 현황(조 원, 분기) : 670.6('19.3) → 777.4('20.3) → 887.5('21.3)
- 늘어나는 부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임
    - 자영업자 LTI(%) : 195.9('20.1분기) → 357.3('21.1분기) → 562.0('21.3분기)
    - 자영업자 DSR(%) : 41.2('19년) → 35.5('20년) → 37.8<sup>①</sup>('21년) → 39.1<sup>②</sup>(지원 유지 시, '22년) / 41.3%<sup>③</sup>(지원 종료 시, '22년)
  -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
  -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경영과 가계소득이 부진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담보대출과 일시·단기 상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 실업을 양산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맞춤형 부채 조정방안과 연락처에 대한 시사점 제시함

•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출 시행, 맞춤형 이자 지원,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검토하여 제시함

•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용자조정 및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부채 일부 감면 방안 제시

- 점포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받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피해액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운전자금의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일부 면제

• 정책 지원을 통한 부채 관리 방안 제시

-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 일정 조건이 충족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을 인정하고,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시행과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을 확대할 필요



# 1. 서론

- 코로나19로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국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21.3분기 기준 자영업자 부채<sup>1)</sup>는 887.5조 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29.6% 상승하였음
    - \* 자영업자 대출 현황(조 원, 분기) : 670.6(‘19.3) → 777.4(‘20.3) → 887.5(‘21.3)
  - 금리 1%p 상승 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8조 9천억 원이며, 가구당 160만 원\* 이자가 증가<sup>2)</sup>하는 것으로 분석됨
    - \* ‘21.11월 잔액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 75.7% 수준 가정

〈표 1〉 자영업자 부채 및 대출 금리

(단위: 조 원, %)

구분	자영업자 부채 <sup>1)</sup>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보증서 담보대출	물적 담보대출	신용 대출
2020년 3월	777.4	2.7	2.9	3.9
2021년 3월	887.5	2.6	3.0	3.8
2022년 1월	900↑ <sup>2)</sup>	3.1	3.3	4.1

자료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주1) 자영업자 부채는 분기 기준

주2) 장도민, “‘빚으로 버틴’ 2년 자영업자 대출 202조 원 급증...고금리 대출로 내몰린다”, 뉴시스, 2022.1.22.

- 대출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기여한 반면, 불가피한 파산(bankruptcy)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키고 한계 자영업자를 양산하였음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4차례 시행하였으며, ‘22.3.3일 금융위원회는 4차 연장을 결정
    - \* ‘20.4.1일 ~ ‘20.9.30일(최초) ~ ‘21.3.31일(1차 연장) ~ ‘21.9.30일(2차 연장) ~ ‘22.3.31일(3차 연장) ~ ‘22.9.30일(4차 연장)
  - 그러나 대출 위주의 금융지원은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가피한 파산(bankruptcy)을 지연시켰으며, 한계 자영업자를 양산함으로써 채무 변제 문제를 부각시킴

1) 사업자대출 + 사업자 가계대출

2) 한국경제연구원(2022.2.15.), 대출구조 개선[변동 → 고정금리]으로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낮출 수 있어.

-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당분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위험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늘어나는 부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일정부분 과밀·과당경쟁의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문제는 자영업자 과밀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은 출구에 대한 대안이 없어 폐업하지 못하고 지위를 지속하고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성과와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 회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임
    -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 소비 억제, 담보부채 리스크, 물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경기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 실업을 양산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맞춤형 부채 조정 방안 및 연락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결과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 부채상환을 위한 지원 설계 및 안정적 폐업과 경영 회복방안을 위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함

## 2.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현황

■ (대출규모)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분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규모<sup>3)</sup>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21.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5조 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3조 원(65.3%),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은 308.2조 원(34.7%)

- \*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증감률(%) : 11.0('19.3) → 15.9('20.3) → 14.2('21.3)

- '21.3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의 50.9%, 기업대출의 59.3% 수준

- '21.4분기는 자영업자 대출 지원금 확대로 9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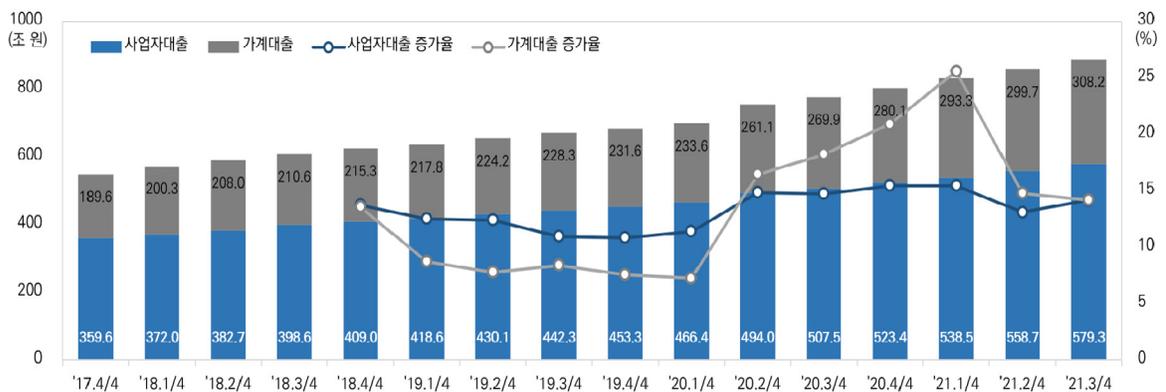
-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1.3분기 기준 257.2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분기인 '19.4분기 191.4만 명보다 65.8만 명 증가

- \* 자영업자 대출자 수(만 명, 분기) : 188.2('19.3) → 233.5('20.3) → 257.2('21.3)

- '21.3분기 기준 1인당 자영업자 대출액은 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완화되었으나, 비자영업자(9,000만 원)의 거의 4배 규모

- \* 1인당 자영업자 대출금액 : 3.6억 원('19.3분기) → 3.5억 원('21.3분기)

[그림 1]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 한국은행 및 기사 참조

3) 한국은행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

■ (다중기관 대출자) 다수의 차입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한국은행) '21.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수<sup>4)</sup>는 140.6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상반기 대비 34만 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대출자)의 56.1% 차지

\* 자영업자 다중채무 차주 수 비중(%) : 57.5('19.상) → 55.6('20.상) → 56.1('21.상)

-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21.상반기 589.9조 원으로 '19.상반기 448.1조 원 대비 31.6% 증가

\*\* 다중채무 대출 잔액 비중(%) : 68.5('19.상) → 68.8('20.상) → 68.7('21.상)

-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 자영업자 수<sup>5)</sup>는 '19.12월 12.9만 명에서 '21.11월 27.2만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였음<sup>6)</sup>

■ (금융권별·소득별) 비은행권<sup>7)</sup>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21.3분기 은행권 대출은 578.1조 원으로 동기 대비 11.3%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309.5조 원으로 19.8% 증가

\* 금융권별 증가율('20.1→'21.3) : (은행권) 9.0%→11.3%, (비은행권) 12.0%→19.8%

-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1분기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1분위, 3분위, 4분위에서 급증

\* '20.1분기에서 '21.3분기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대출 증가율은 1분위 '8.1%→17.3%', 2분위 '15.0%→17.4%', 3분위 '11.8%→20.4%', 4분위 '10.4%→16.1%', 5분위 '8.9%→10.1%'임

■ (신용대출·업종별)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고, 영세 업종과 코로나 타격 업종에 취약대출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21.3분기 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가율은 18.0%로 비자영업자 11.2% 대비 6.2% 높음

\* 비자영업자 신용대출 증감률(월) : 8.4%('19.3) → 14.7%('20.3) → 11.2%('21.3)

4) 자영업 다중채무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로 일반 가계부채 다중채무보다 과대 추산될 수 있음

5)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6) 김영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연합뉴스, 2022.1.18.

7) 비은행권이란 상업은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합 금융 회사, 단자 회사, 상호 신용 금고, 신탁 회사, 보험 회사, 채신 관서, 대부업체 등을 일컫음

- '21.1분기 업종별 자영업자 취약대출자는 영세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여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 대출자 수 기준 자영업 취약비중은 도소매 12.3%, 숙박·음식 11.3%, 여가 10.3%

■ (연체율) 그러나 자영업자 취약대출자 비중과 대출 연체율은 감소하고 있음

-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점진적 감소
  - \*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증감률(월) : 0.29%(‘19.11) → 0.21%(‘20.11) → 0.2%(‘21.11)
- '21.2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대출자)<sup>8)</sup> 비중은 대출금액 기준 9.0%이며, 대출자 수 기준으로는 10.9%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임
  - \* 대출금액 기준 취약차주 비중 : 11.4%(‘20.2분기) → 10.9%(‘21.2분기)
  - \*\* 차주 수 기준 취약차주 비중 : 9.5%(‘20.2분기) → 9.0%(‘21.2분기)

■ '20.4월~'21.10월까지 쏠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261.2조 원 지원함

- 만기 연장 247.4조 원(95.5만 건), 원금상환유예 13.6조 원(8.6만 건), 이자 상환유예 2,301억 원(1.7만 건)
- 원금·이자 상환유예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을 상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10월)<sup>1)</sup>

(단위: 억 원, 조 원, 만 건)

구분	만기연장 일시상환		분할상환대출 원금상환유예		분할상환 대출 이자 일시상환유예	
	금액(조 원)	건수	금액(조 원)	건수	금액(억 원)	건수
은행	155.8	64.6	10.7	2.8	847	0.7
정책금융기관	90.7	30.3	2.2	1.9	747	0.6
제2금융권	0.9	0.6	0.7	3.8	706	0.4
전 체	247.4	95.5	13.6	8.6	2,301	1.7

자료 : 금융위원회·윤관석 의원실(연합뉴스, '코로나 피해' 증가·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기 100만건 넘었다', 21.12.14 기사 참조)  
 주1) 월별 만기연장 지원 실적은 재연장(roll-over) 신청 주기(통상 1년)에 따라 변동

8)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를 말함

### 3.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점

#### 가. 도산 위험성 증대

-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가중은 도산 위험성을 높임
  - 코로나19 전·후('19년/'21년) 자영업 가구 가계소득 증가율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가구 증가율 보다 낮음
    - '19년 대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가구소득은 각각 4.9%, 7.8%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가구는 3.3% 증가
    - 또한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은 '19.4분기 대비 '21.3분기 약 9.6% 증가한 반면, 근로자 외 가구 사업소득은 5.0% 감소(통계청)

〈표 3〉 가구특성별·소득분위별 가구소득

(단위: 만 원)

가구주 종사상지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19 증감률
상용근로자	7,051	7,439	7,719	7,958	8,096	4.9%
임시·일용 근로자	3,335	3,502	3,565	3,704	3,844	7.8%
자영업자 <sup>1)</sup>	6,232	6,361	6,375	6,519	6,587	3.3%

자료 : 통계청

주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기타종사자

- 자영업자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인 LTI(Loan To Income)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2.3월 금융 조치 종료 시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을 41.3%, 지원 유지 시 39.1%로 추정

\* 자영업자 LTI(%<sup>9)</sup>) : 195.9('20.1분기) → 357.3('21.1분기) → 562.0('21.3분기)

#### 나.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는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음
  - 코로나19는 부채 규모뿐 아니라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까지 증가시킴
    - \* '19.3분대 대비 '21.3분기 대출 비중 : (은행권) 68.2% → 65.1%, (비은행권) 31.8% → 34.9%

9)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1.3월, '21.9월) 자료 활용

-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를 확대될 수 있음
  - 한국은행 ‘21.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수는 140.6(56.1%)만 명, 나이스평가 정보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수는 ‘21.11월 기준 27.2(9.8%)만 명

## 다. 사회적 부담 가중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부실한 사회안전망 문제는 자영업자 과밀 문제를 양산하였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대안이 없어 폐업하지 못하고 자영업자 지위를 지속하고 있음
    - \* ‘20년/‘19년 자영업자 폐업자 수/폐업률 : 83.1만 건/13.1% → 82.8만 건/11.8%
-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경영과 가계소득이 부진하며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담보대출과 일시·단기 상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자영업자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
    - 잠재 위험이 큰 자영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1.3분기 69.3%, 환금성이 낮은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9.0%로 비자영업자 대비 각 1.2배 및 2.5배임
    - ‘21.3분기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일시 상환 대출은 45.6%, 만기 1년 이내 대출 69.8%(개인사업자 대출<sup>10)</sup>임
  -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취약가구로 전락시키고, 실업을 양산하여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 폐업률이 0.1%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 372~2,007억 원으로 분석됨<sup>11)</sup>
  -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거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용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0) 신호경, “빚으로 코로나 버틴 자영업자들... 대출 887.5조원, 1년 새 14%↑”, 연합뉴스, 2021.12.23.

11) 남윤형(2015),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4.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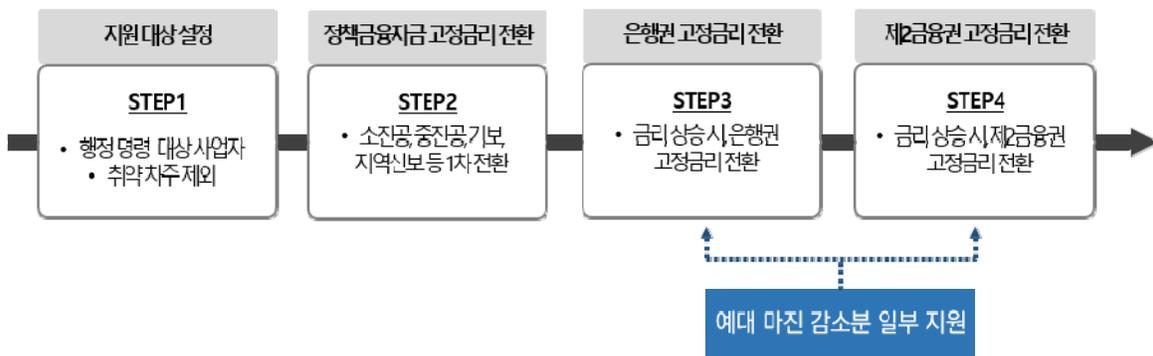
### 가. 맞춤형 부채 관리 방안

#### ①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에 대한 고정금리 대환 대출 시행 고려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지원 부터 시작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고정금리를 단계적으로 이전

- 사회가 수용하는 선에서 보조금 등을 통한 예대 마진 감소분 보전 방식으로 민간금융 기관 참여를 촉진

[그림 2] 단계별 고정금리 이전 방안



#### ② 맞춤형 이자 지원 검토

■ 성실 차주(대출자) 이자 지원

-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실 차주를 선별하여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행정명령 적용 (대출자) 이자 지원

- 행정명령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자에 대하여 매출 감소분에 비례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③ 단계별 이자 유예 및 면제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및 상환 부담 분산을 위한 단계별 이자 면제 검토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을 방지하고 상환 부담이 분산될 수 있도록, 부채 규모, 부실 정도, 경영 여력, 가계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이자 면제를 검토

④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채무변제계획 컨설팅을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채무변제 계획 컨설팅 시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및 재기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채무변제계획 및 컨설팅을 지원
- 기업회생 컨설턴트, 변호사, 파산관재인 등을 구성하여 재생계획 수립 및 부채정리 지원

⑤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

나.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기 지원 방안

①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용자조정<sup>12)</sup> 프로그램

■ 점포 유지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받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피해액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담보대출에 대한 단계적 용자 프로그램은 부동산 시장 침체 시 취약차주들의 상환 부담 경감 및 차압 방지의 효과가 있음
  -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매출이 감소한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담보 대출자, 부채 총액이 월 소득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

12) 미국 특별구제제도 참조

- (지원내용) ① 총 융자금액 산정, ② DTI가 일정 비율이 될 때까지 금리 인하, ③ 일정 비율까지 낮추지 못할 경우 상환기간 연장, ④ 계속 융자금액이 일정 비율을 상회할 경우 원금 조정
- (인센티브) 채무조정 성공 단계별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상, 성공적 상환 채무자에 일정 원금 감액 등

## ②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

### ■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전자금 부채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대출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일부 면제

-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에서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한 운전자금 부분을 상환금에서 감면

- (대상) 행정명령·매출감소, 취약 소상공인·자영업자이면서 ①, ②, ③\*에 대한 비용 증빙 가능 시

- \* ① 장·단기 운전자금, 부채 재융자, 임대료·원자재 매입, ② 설비·기계·장비·원재료 매입, ③ 사업재건, 재개, 수리, 개선 등

## 다. 정책 지원을 통한 부채 관리 방안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함

####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와 범정부 차원의 논의 필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문제는 금융채무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논의와 소상공인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참여가 필요

### ② 조건부 폐업 인정

#### ■ 일정 비율 이하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차주가 폐업을 원할 시 폐업 인정

- (지원 대상) 채무 일정 비율 이하 + 다른 경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임금근로자 취업 증빙이 가능한 대출자

• (조건) 폐업 시 회수 자금 대출금 일부 상환 조건

- \* 현재는 폐업 즉시 사업자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원하거나 경쟁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영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대출하거나 통신판매업으로 업종 변경하는 상황 발생

③ 원금 일부 면제를 포함한 패키지 정책

■ 경영, 재기, 폐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채 원금 일부를 탕감하는 패키지 정책 시행

- 재기 지원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업종 전환, 직종 전환 성공 시 일부 부채를 탕감하는 패키지 지원 정책 설계

④ 경영안정 중심의 정책 비중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 지원 비중 확대
  - 상가임대차, 정책 자금 지원, 사회안전망, 수수료 지원 등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므로 비중을 확대
  - 점포경영,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등 지원 대비 실효성이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비중을 축소

## 참고자료

### [국내 문헌]

남윤형(2015),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사회적 비용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서정호(2013), 「다중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한 네가지 접근 방법」, 한국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202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1.3월, ‘21.9월)」.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2021년 12월)」.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2021년 6월)」

### [기사 인용]

김영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연합뉴스』, (2022.01.18.).

김현동, 「자영업 빚 850조, 벌벌 떠는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2021.07.20.).

신호경, 「빛으로 코로나 버틴 자영업자들... 대출 887.5조원, 1년 새 14%↑」, 『연합뉴스』, (2021.12.23.).

한국경제연구원, 「대출구조 개선[변동 → 고정금리]으로 가구당 이자부담 연 80만원 낮출 수 있어」, 보도자료(2022.2.15.).

### [인터넷]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index>)

통계청(<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한국은행(<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발행인 : 오동윤

편집인 : 홍운선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i.re.kr>

인쇄처 : 주식회사 위드원커뮤니케이션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